

<서평> 조선왕조의 사대주의와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 계승범 저,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푸른역사, 2009) —

李汶紀*

21세기에 '강대한 중국'과 필연적으로 부대끼며 동거해야 할 작은 나라 대한민국(통일 이후의 코리아를 포함하여)의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고, 최대의 국가이익과 최적의 안보를 보장하는 길은 무엇일까? 중국 연구자뿐 아니라 이 시대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이의 핵심적 화두일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머릿속에 끊임없이 뱅뱅 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잡힐듯 하면서도 쉽게 잡히지 않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중국 그 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국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중관계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외교노선을 중(역사성)으로 횡(주변국과의 공간성)으로 부단히 세분하고 종합하는 반복 작업이 필요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중국을 바라 봐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시대 한중관계와 한국외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실마리를 조선시대 한중관계의 역사로부터 찾으려는 시도가 <조선시대 해외파병과 한중관계>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 명·청의 파병요청에 대한 조선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조선시대 양반엘리트의 대중국 인식의 실체를 조망하고, 나아가 그것이 한국의 근현대사에 어떤 유산으로 작용했는지를 거시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필자가 조선시대 명·청의 파병압력에 대한 내부논쟁을 한중관계사 연구의 코드로 선택한 이유는 조선 초기부터 중반기까지 200여 년 동안 총 15차례

*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조교수.

에 걸쳐 고르게 분포한 사안이며, 파병사안이 재정적·정치적·국제역학 관계 등 모든 측면에서 국익을 위한 현실적 손익계산을 가장 꼼꼼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논지에 따르면, 조선시대 대중국 인식은 전반기와 중·후반기로 극명하게 대비된다. 총 15차례의 파병요청(및 압력)에 대한 조선의 대응은 거절(5회), 소극적 파병(6회), 적극적 파병(3회), 취소(1회)로 분류되지만, 그 차이는 초기와 중·후반기에 골고루 분포하며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이 거절이든 파병이든 이를 결정하는 조정과 양반엘리트의 정세와 국익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파병문제를 통해 본 대중국 인식의 결정적 분기점은 중종 시기이다. 1543년(중종38년) 명의 건주여진 원정에 대한 대응은 15차례 파병요청 중 4번째이며 유일한 취소사례인데, 그 전의 세종31년(1449년), 세조13년(1467년), 성종10년(1479년)의 세 차례 대응과 중종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다. 조선 초기 세 차례의 대응은 파병 거절(세종)과 적극적 파병(세조), 생색내기용 소극적 파병(성종)으로 서로 달랐지만, 그 이면에는 대명사대라는 이념적 가치보다는 오로지 국가의 이해득실에 따른 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15세기까지의 대중국 인식은 비록 사대주의가 지배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익에 기초한 현실주의적(혹은 실용주의적) 사대관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고려시대 중원의 대국을 섬기되 특정 왕조를 섬기지 않는다는 대중국 외교관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6세기 중종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중종의 파병취소 사건은 웃지 못할 해프닝에 가깝다. 당시 동지사 최보한(崔輔漢)이라는 자가 북경에 있었는데, 산둥 순무어사(山東巡撫御使) 호여보(胡汝輔)라는 자가 조선에 청병(請兵)해 건주여진을 정벌하자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 조정에 급히 알렸는데, 중종과 신하들은 노타임으로 파병준비를 명령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귀국한 동지사 일행의 보고와 그 후 다른 사신들의 보고에서 명이 몽골을 방어하는데 급하기 때문에 건주여진 정벌계획은 없다는 제대로 된 정

보를 접하고 파병준비를 중지시킨다. 필자는 15세기 꼼꼼한 국익계산에 따른 파병대응과 달리, 중종의 ‘알아서 가는 식’의 파병준비가 향후 조선 양반엘리트의 대중국 인식의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조선 초기 ‘현실적·상대적 사대관’이, 중종 때부터 조선의 국익과 대명사대를 완전히 동일시하는 ‘이념적·절대적 사대관’으로 전환된 것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초기의 대중국 사대관이 ‘군신관계’에 비유된다면, 중종 이후의 사대관은 ‘부자관계’에 비유된다. 임금은 죽으면 새로운 임금을 섬기면 되지만, 아버지는 죽어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섬김의 대상이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사대관이다. 실제로 중종 이후부터 실록의 여러 군데에서 명을 아버지의 나라로 숭배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중종이 이처럼 대명 사대관을 내면화된 정신적 신념과 절대적 가치로 삼게 된 배경에는 반정(反政)으로 집권한 중종이 취약한 권력기반의 정통성을 명나라에서 찾으려는 시도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가 이 시기부터 유행한 주자학과 소중화주의 사상이다.

중종 이후 조선 엘리트의 정신세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존명사대의식은 17세기 초반 광해군 시기에 조정의 격렬한 논쟁과 정변을 야기한다. 만주지역의 소수민족을 차례로 정복한 건주여진의 누루하치가 후금을 세워 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조선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심각한 외교적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명은 후금의 측면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의 지지를 필요로 하고, 후금은 배후의 약점을 없애기 위해 조선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 나라 간의 첨예한 외교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명의 파병요청과 후금의 압력(또는 제후요청)이 첨예하게 부딪친 1618년에서 1622년 사이 조선의 조정은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파병관련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구도는 명의 파병요청을 거절하는 광해군과 사대의 신의를 키려는 양반 신료들 간의 대립이었다. 결국 광해군은 정과를 초월한 양반엘리트 집단의 거센 공격을 받고, 폐위되어 역사의 이단아로 전락하고 말았다.

광해군 이후의 파병 사례는 후금의 영향력이 이미 명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두 차례의 침략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인조 시기와, 청이 수립된 이후의 효종

시기에 있었다. 인조와 그 신하들이 전쟁 패배 후 치욕으로 느낀 것은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대상이 오랑캐였다는 점이였다. 비록 마지못해 청을 중주국으로 받들기로 했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존명의리'와 '재조지은'의 관념이 지배했다. 청의 연이은 정명(征明) 원정을 위한 파병요청에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하거나, 마지못해 소극적인 파병으로 일관한다. 조선시대 마지막 파병사례는 청 건국 초기인 효종 시기이다. 청은 명의 잔당 세력인 군부 진압과 북방의 러시아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청은 효종에게 러시아 정벌(나선정벌)에 파병을 요청하고, 효종은 전쟁 대상이 명이 아니라는 위안과 함께 북방 오랑캐를 정벌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전한다.

조선왕조 시기 파병 사례를 통해 본 조선의 국가정체성과 대외정책은 한중관계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확립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먼저 한중관계의 역사적 맥락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조공-책봉관계로 형성된 중원 제국과 한반도 국가 간의 관계가 시대별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와 조선초기까지의 대중국 사대관은 현실적 국익에 기초한 조공관계였다면, 중종 이후 조선 중후반기의 대중국 사대관은 현실적 국가 이익과 무관한 정신적으로 깊게 뿌리박힌 절대주의적 사대관으로 변했다. 조선 중후반기 대명 사대주의는 한중관계 2,000여 년 역사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반적 宗藩관계에서 볼 때 전무후무한 특이 사례라 할 수 있다. 명이 멸망하고 청이 수립된 지 60년이나 지난 1704년부터 일본의 조선지배가 현실화된 개항 초기까지 조선왕실에서 매년 거행한 大報壇 제사의례는 명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섬기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준다. 이처럼 국제정세 현실의 변화를 애써 외면하면서, 이미 역사에서 사라진 명 제국에 대한 의리와 충성에 집착하려는 집단취면에 빠진 조선왕조가 그 후로도 200여 년을 더 존속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책의 저자는 그 원인은 아이러니하게 확고한 통치기반을 확립한 청 제국의 내정간섭 중단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조선후기

의 소중화론은 “청 질서의 보호막 안에서 외친 ‘수족관 안의 자부심’이었다”라는 것이다. 청의 쇠락과 함께 조선 왕조의 몰락이 시작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역사의 대가였다.

다음으로 조명관계에서 배우는 역사의 교훈은 오늘날 동아시아 정세를 해석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500년 왕조국가 조선시대 영욕의 역사에서 명나라와 청나라가 차지하는 절대적 위치만큼이나, 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과 성장의 배후에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17세기 명 제국의 몰락과 청의 부상은 21세기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시대상황과 유사하다. 책의 저자가 서문에서 언급하고,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다.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이웃의 큰 대국인가, 아니면 유일한 상국인가?” 조선의 역사를 다룬 서적이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의식에 정면으로 던지는 저자의 도발적 질문이다. 물론 대한민국(및 통일 코리아)의 정체성 확립이 미국에 대한 인식정립만으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17세기 명·청의 세력교체와 21세기 미·중 세력구도 재편은 그 성격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는 남북분단의 시대이고 민족통일이라는 숙명적 과제가 있다. 저자가 던진 한-미관계에 대한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도발적으로 들리는 위 질문에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추가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및 통일 코리아)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두 개의 질문은 우리 시대 모든 지성이 냉철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역사적 도전이고 사명이다.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8. 29.			2012. 11. 21.	2012. 11. 30.